

3.1절 105주년 기념사의 평가와 후속 조치

Online Series

2024. 03. 06. | CO 24-21

정 성 윤(통일정책연구실장)

2024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해 기념사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독립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3.1절 기념사가 과거와 확연히 달랐던 점은 바로 3.1운동은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천명한 점이다. 이번 3.1절 기념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 사항들을 제언한다.

3.1절 105주년 기념사 주요 내용

이번 기념사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3.1 독립선언은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념사에서 3.1운동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미래지향적 자유주의 독립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1 운동은 단순히 왕정의 복원이 아닌 한민족 남녀노소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를 지향했으며, 대한민국이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고 번영과 평화를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1운동에서 비롯된 자유주의를 계승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3.1 독립운동은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통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 주민이 전체주의, 억압통치, 궁핍, 절망의 늪에 갇혀 있는 상황은 인류 보편 가치에 역행되므로,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부여했다.

셋째, 3.1운동의 합당한 평가와 올바른 계승을 강조하였다. 기념사에서는 무장 독립운동 뿐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 노력도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의 대상과 폭을 확장함으로써 우리 민족 모두가 독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재조명했다. 이는 한민족 모두가 만들어낸 독립·건국·부흥의 역사이므로 어느 일부가 이 소중한 역사의 성과를 독점할 수 없고, 그 가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올바르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넷째,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산업·금융·첨단기술 분야 등에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3.1절 기념사의 의미와 평가

3.1운동 105주년 기념사의 키워드는 단연 통일과 자유였다. 이번 기념사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당연히 독립(17회)이었지만, 자유(17회), 북한(9회), 통일(8회), 번영(8회)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 3.1절 기념사들 대부분이 반성, 화해 등의 이슈를 주로 다루어 왔다는 점과 비교할 때, 이번 기념사의 지향점은 분명 차별적이다. 기념사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의 가치와 교훈을 확장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독립운동은 민족자결주의적 시각에서, 혹은 압제에 저항한 무장 저항운동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3.1절 기념사는 105년 전 각계각층 선조들의 독립 염원과 노력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의 성취는 모두 자유주의에 기반했기에 가능했음을 분명히 했으며, 민족의 완전한 통일로 독립운동은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3.1 독립정신은 자유 의지이며, 독립운동이 곧 통일운동이다. 이번 기념사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북한 동포들과 탈북민들도 마땅히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소중한 동반자이자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이다. 따라서 이들 또한 자유와 번영, 통일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우리 선조가 남긴 숙제이자 사명이다. 그러므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한반도 북쪽에 자유의 숨결을 불어 넣는 것은 한 세기 전 한반도 곳곳에 울려 퍼졌던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그 외침의 메아리이고 제2의 3.1운동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민족·반통일·반평화·반인륜적 행태에 대한 강력하고 결연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최근 우리를 민족이 아닌 미국 식민지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정의했으며, 사실상 핵 무력을 동원한 남한 점령 의사를 천명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대북제재 고동 지속·한류 등 정보유입에 의한 민심 악화·핵 기술력 자력 확보 난망·남한의 정세 주도권 강화 등 소위 '5중고(重苦)'에 대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은 남북관계를 민족적 관점에서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리하고, 핵무기를 동원한 극단적 대남 강압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¹⁾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분단 고착화를 지향하는 민족 분열책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전쟁을 통해 남한을 정벌하겠다는 협박은 7천만 한민족과 230만 외국인 거주자들을 향한 반평화적·반인륜적 행태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민족 분열책에는 민족 일체성으로, 핵 위협에는 평화로, 분단 고착화에는 통일로, 반인륜적 의지에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강력한 국제연대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조치이다.

기념사 후속 조치 방향

3.1절 기념사에 담긴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의지를 어떠한 방향과 내용을 뒷받침해야만 할 것인가? 결국 이 문제는 대북·통일정책의 기초와 실천과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는 역으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호기(好機)이다. 따라서 북한의 퇴행적 선택의 배경이 된 5중고(重苦)를 전략적인 대북 압박점(pressure point)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초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미일 3국 협력을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범국제적 연대로 확대 구축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더욱 가속화해 우리의 자유·평화·통일의지를 북한 동포들의 가슴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독자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해 북한의

1) 북한의 태도는 '핵 무력의 실제 사용 위협을 통해 우리의 통일 의지와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변경시키려는 공세적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전형적인 핵강압전략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핵 고도화 노력을 쓸모없게 만들어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계속 주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후속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제2의 3.1운동을 위한 새로운 통일비전을 구상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DNA와 역사에는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내재 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이 반자유·반평화를 넘어 반민족적·반역사적인 이유이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한 진정한 평화공존은 난망하며, 우리마저 민족을 등지고 통일을 외면하면 한반도는 영구 분단의 길로 선회할 것이다. 한반도의 적자(嫡子)인 우리가 이 엄중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민족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외쳤던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주도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남북한 동포와 세계를 향해 자신 있게 그 의지를 선포해야만 하는 적기이다.

둘째, 북한 실상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3.1 운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압제를 알렸듯이, 우리는 이제 참혹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북한 정권의 반역사적 폭정에 대해 전 인류와 공분(公憤)해야 한다. 북한의 외교관들과 해외 노동자들 스스로 북한 정권의 퇴행을 자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얼마 전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해 확산하거나, 북한 실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참혹한 실상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주목도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가 매년 3.1절과 8.15 광복절을 통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굳은 의지를 대내·외로 천명하는 날로 관습화해야 한다. 자유를 향한 3.1절 정신은 8.15 광복을 통해 계승되었지만, 불행히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미완으로 남아 있다. 8.15 광복이 자랑스러운 우리 건국의 계기가 되었지만, 3.1절 정신을 계승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가 기념일 중 한민족의 통일 의지를 되새기는 날은 없다. 정부가 이미 7월 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지정하고 ‘먼저 온 통일’이라 기념하는 것과 더불어 ‘곧 다가올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전통 또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